

## 9. 세계를 집어삼킨 광기, 신자유주의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월가 금융자본은 여전히 과거 영화를 되새기며 반격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본디 신자유주의는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잉 축적된 금융자본을 대거 파괴함으로써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을 상당 정도 해소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실물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둘 사이 불균형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논리로 무장한 채 재공격해 올 수 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 주도변밀한 전환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 이익 극대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과잉 축적된 금융자본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실물경제도 회복하고 둘 사이 불균형도 완화한다는 전략이었다. 혁명적이라 할 만큼 파격적 수준에서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다투어서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할 이론 장치를 개발했다. 그들은 부자들이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투자 활성화로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을 펼쳤다. 이 이론은 기업 감세를 뒷받침해줌으로써 금융자본이 기업에서 보다 많은 이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들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경제 최대 적으로 규정했다.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정부 경기부양책도 반대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금융자본 이익극대화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들은 정부 재정 중심 경기 부양책을 반대하는 대신 ‘통화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신축성 있게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통화주의는 부자 증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재정 팽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벽 구실을 했다.

또 다른 전략가 그룹은 신자유주의를 지구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이를 관철시킬 전략을 담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안에는 탈규제, 긴축재정, 자본시장 자유화와 외환시장 개방,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 합병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략의 또 하나는 개발도상국이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관철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도개혁 성향 정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를 개혁 일환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묘하게도 외환위기를 전후해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과 너무도 맞아떨어졌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미국은 일본 등 이웃 나라들 도움마저 냉정히 차단했다. 외환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전격 수용해야 했다. 또한 중도개혁 성향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은 이를 개혁 일환으로 간주하고 지지를 보냈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소름끼칠 정도로 공격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흐름을 주도한 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자면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과시했다. 그들은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진보 세계를 마음껏 조롱했다.

## 실물경제 희생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자본에 가해졌던 온갖 규제들이 철폐되는 조치가 잇달아 취해졌다. 금융자본은 기업에서 자유롭게 이윤을 추출할 위치를 확보했다.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인수합병 위협을 가해 기업을 굴복시킬 수 있었고, 주주총회를 장악해 자신들의 원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었다. 말을 듣지 않은 경영자는 가차 없이 잘랐다.

이윤 획득 기회가 크게 늘면서 금융자본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자 미국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흥분한 일부 논자들은 미국 경제가 완전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신경제’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오르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전성시대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1인당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최악으로 기억된 1970~1980년대보다도 못한 바닥 수준이었다. 1970년대 미국 1인당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2.49%였다. 반면 1990년대는 2.02, 2000년대는 0.45로 수치가 더 떨어졌다.

1인당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유층 소득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세기 초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 황금기를 포함하는 1945년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상위 계층 소득집중도가 높아졌다면 소득재분배가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창출된 소득이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이 쏠렸을 뿐이라고 너그럽이 봐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GDP 증가율이 바닥을 기는 수준에서 상위 계층 소득집중도가 크게 높아졌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소득재분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서민들 소득 증가는 억제하면서 소수 부자들 몫만 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1인당 GDP 증가율은 극히 저조한데 상위 계층 소득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소득불평등 악화 메커니즘과 깊은 연관이 있다. 통상 서민들 삶은 금융자본 보다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실물경제 동향에 좀 더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 투자 활성화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랬을까? 이 점은 신자유주의가 기업 주가 상승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동원한 대표적인 수단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초고배당, 자사주매입, 장기 기술개발 억제 등 네 가지였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은 종업원원 충성심과 작업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초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투자 능력을 약화시켰다. 장기 기술개발 억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 모두는 실물경제 기반을 침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실물경제를 희생시켰다. 서민들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 거품 위를 향해하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조건에서 상위 계층 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 역시도 실질 가치가 아닌 가공의 가치 즉 거품에 의존한 것일 가능성이 컸다. 문제는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드러난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즉 이윤 창출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던 주가 상승 수단들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잠식하는 것들이었다. 기업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주가는 계속 올랐다. 기업 가치와 주가 사이 괴리가 커진 것이다. 이는 지속적 주가 상승이 전적으로 거품에 의존했음을 의미한다.

사태의 본질은 결과를 통해 의심할 여지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거품은 때가 되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2000년 4월 월가 주가대폭락이

일어난 것이다. 단 하루만에 1조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질 만큼 대폭락 충격은 컸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연방준비은행(FRB)이 나섰다. 연방준비은행은 2000년 한 해 동안 무려 11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저금리 자금을 무제한으로 풀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가까스로 파국이 수습되었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 역시 미국 경제가 전적으로 거품에 의존해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초저금리로 돈이 왕창 풀리자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대출업체들은 대출 대가로 수수료만 챙기고 원리금 상환 청구권을 투자회사에 팔아 넘겼다. 대출업체들은 상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기에 신용등급을 가리지 않고 대출해주었다.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는 이자가 비쌌다. 투자회사에 모인 상환 청구권 중에서 낮은 신용등급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투자회사는 이들을 등급에 따라 묶은 뒤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고객 중에는 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행들은 만약 경우에 대비해 AIG 등 보험회사에 위험대비 보험을 들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구입한 주택을 판매해 원리금도 상환하고 프리미엄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실수요자들 구입 능력을 넘어서자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일시에 꺼지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은 폭락했고 대출 받은 시민들은 주택을 처분해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파생금융상품들은 일시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융 생태계가 파열되면서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무너져 내렸다. 보험회사들조차 몰려든 고객 청구를 감당 못해 함께 나자빠졌다.

사태의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세계 주식 시장은 20조 달러 이상 손실을 보았다. 이는 세계 GDP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렇게 터졌다.

미국 정부는 무너진 금융권을 복원하기 위해 3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연방준비은행 또한 채권 매입 방식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2014년까지만 해도 4조 달러 이상 풀었다. 이를 위해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던 연간 통화발행을 3조 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거품 경제에 의존하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시스템임이 명확해졌다. 신자유주의가 남긴 잔재는 요소요소에 남아 있지만 그 자체는 더 이상 대세가 될 수 없었다.

## 신자유주의 포로가 된 한국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역시 신자주의 흐름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미국 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퍼센트까지 풀어주는 등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외환의 유입과 유출 또한 한결 자유롭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그동안 억제되었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소액(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으며, 자본시장의 공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는 1999년도를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뮤추얼펀드의 도입, 건전한 기관투자가 육성, 기업공개 및 상장 요건 완화, 증권 위탁거래 전문회사 및 채권전문 딜러회사 설립요건 완화, 신용평가기관의 육성 등 제도적 보완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로부터 한국의 주요 기업들 역시 미국과 같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른바 주주자본주의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원된 수단 역시 미국과 매우 흡사했다. 지속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초고배당이 이루어졌다. 포스코의 경우는 수익의 절반을 배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상반기 동안 국내 기업이 여기에 쏟아 부은 자금만도 4조 원이 넘었다. 마찬가지로 장기 기술개발 투자를 방해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제금융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2004년 한 해만 해도 외국인의 수익 증가는 36조 원에 이르렀다. 또한 1998년 이후 7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회수한 이익은 줄잡아 70여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것이다.

모두가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시피 이어한 과정이 빚어낸 최종 결과는 저성장 구조화와 사회적 양극화 심화였다.

## 주인 행세한 뜨내기 손님

장하준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경제학자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속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수작들에 대해 그럴듯한 논리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주주 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고상한 표현을 써 가며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기업 이해당사자 중에서 노동자나 협력사는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얻지만 주주는 수익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 이익 중심으로 접근할 수익 창출에 충실해지면서 경영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주주들은 보다 높은 이윤을 쫓아 끊임없이 이동했다. 그들은 기업 입장에서 뜨내기손님에 불과했다. 주주들은 기업 장기 발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했다.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동원한 수단들은 모두 단기 이익 극대화 압박에 따른 것들이었다. 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 펀더멘탈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는 뜨내기손님들이 짐짓 주인행세 하다가 모든 것을 망쳐먹은 체제였다. 이러한 장면만으로도 신자유주의를 구성하고 있던 관념과 논리들이 얼마나 현실과 유리되거나 배치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 